

노사주도적인 산업안전보건의 필요성

박종식*

한국의 4대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은 1964년 가장 일찍 시행되었으며,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체계는 산재 '예방'과 '보상'의 형식적인 틀이 완성되었다.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산업공학(안전), 의학/간호학(보건) 영역의 전문가들과 정부의 노력으로 재해율이 크게 감소하는 상당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첫해인 1982년 한국의 공식 재해율은 3.98이었는데 1995년 0.99로 처음으로 1 이하로 재해율이 떨어졌다. 이후 연도별로 등락이 있었지만, 재해율은 점진적으로 낮아지면서 2016년 0.49까지 낮아졌다. 2021년 재해율은 0.63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중소 사업장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제도 활용이 증가한 것이므로 크게 우려할 수치는 아니다. 다만 산재발생 1년 이내 사망자로 집계하는 중대재해(fatal injuries) 발생률이 독일, 일본 등 한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감소의 과제가 있다.

한편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과거에는 "일하다 보면 다칠 수도/아플 수도 있지"라는 인식이 만연했었다. 생산현장에서 노사 모두 '생산'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등한시했으며, 안전에 대한 지출은 투자나 자산(asset)이 아니라 단순 비용(cost)이라고만 생각했다. 또한 예전에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여러 명이 한 번에 사망하는 대형 산재사고가 아니면 산업재해 관련 뉴스를 접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어서면서 과거와는 달리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사람이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떨어짐, 감김끼임 등 재래형 산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작업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이 커졌고, 특히 젊은 노동자들이나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더욱 반감이 크다. 기업과 노조 또한 과거보다 산업안전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언론에서 산재 사망사고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고, 다양한 분석 기사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2차 전부개정이 있었으며, 나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foral@kli.re.kr).

아가 2021년 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1년 후인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건설업은 50억 원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중대재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로드맵'에서는 1,220개 조항의 방대하고 세세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 방대한 조항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안전관리 자체를 포기하는 현실에서 '규제의 한계'를 실감하고 사업장 단위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으로 제반 제도의 재설계,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재정비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즉, 법제도를 통한 외부규율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업장 내 주체들의 자기규율로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노사의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이고, 산재예방을 위해서 회사와 노조는 자원과 역량을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노동리뷰』 2023년 5월호 특집을 기획하였다. 최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대책이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으로 거대한 방향전환이 진행중인데, 그 토대가 되고 있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무엇인지 의미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노사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 정도와 산업안전보건 역량을 진단하면서 노사의 보다 적극적인 산업안전 의제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수준에서 노사의 산재예방 활동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00인 이상 기업들의 평균 안전보건 담당자수 8.13명, 매출액 대비 지출 3%대, 그리고 100인 이상 기업의 노조 산업안전담당은 평균 2.2명, 타임오프 중 17.3%를 산업안전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들로 나타난 회사와 노조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역량 수준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현재로서는 평가할 수 없다. 그렇지만 노사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이 중요함에도 그동안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보다는 매출액/영업이익 증가와 임금 인상에만 매달려 왔던 것이 현실이다. 회사 내에서 안전보건담당 부서가 생산 및 인사총무 부서보다 폄하되던 현실, 노조 내에서도 노안담당자들이 정책부서나 조직부서보다 한직으로 인식되던 현실을 동시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22년 11월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로드맵'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정부와 민간 부문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세밀하고 촘촘한 규제들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렵다. 이제는 사업장 내의 리스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사가 주체가 되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필요한 방안과 조치들을 노사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 아래로부터, 현장에서부터, 노사가 함께 주도하는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번 특집 글의 논의들이 노사주도적인 산재예방활동을 향한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KLI**